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9호 소개

□ 헌법판례동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국가채무위기와 관련한 심판 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국가재정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가 자국이 독일채권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아르헨티나 공화국이 독일 연방민형사법원에 대하여 국제법상 파산법의 일반원칙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 연방민형사법원은 아르헨티나 공화국이 주장하는 국제법상 파산법의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연방헌법재판소도 연방민형사법원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의 <경기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깃발을 흔든 행위를 처벌한 것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은 청구인이 축구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깃발을 흔들어 공공의 평온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대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으며, 표현의 내용만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과 상황 역시 살펴 공공의 평온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기장에서 깃발을 흔든 행위 자체를 공공의 평온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테러 범죄로 복역 중인 외국인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의 위헌 여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전 규정상 테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가석방되기 위해서는 일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외국인 범죄자에게 출국명령이나 추방 등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석방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봉쇄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 형벌의 적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선언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즉시 무효가 될 경우에 모든 테러 관련 범죄자가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입법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의 폐지 시점을 장래로 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성전 건축 거부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가 이미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의 시(市) 소유 부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시가 이를 거부하자, 우크라이나 법원을 거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종교행사 장소가 종교의 자유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관련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9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칠레 헌법재판소의 <칠레 소비자보호원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위헌성> 사건은 행정부에 속하는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중재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이를 법원의 재판으로 다툴 수 없게 규정한 법률에 관한 것입니다. 칠레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이 사법부의 관할을 침범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생리대에 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위헌성> 사건은 생리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여성에게만 필요한, 대체할 수 없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특히 저소득 여성을 비례성을 상실하여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부자가정(父子家庭)의 유족기초연금 수급 제한의 합헌성> 사건은 유족기초연금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부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유족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구 국민연금법 조항에 관한 사건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일본 헌법 제25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함에는 입법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법률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동 조항은 부자가정의 경우 남편에게도 유족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평화안전법제정비법'에 근거한 자위대 방위출동명령 불복종 소송> 사건은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출동 사유를 확대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일본 군인인 원고는 위 법률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법률로서 교전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제9조에 반하므로, 위 법률에 근거한 방위출동명령에 불복종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복종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최고재판소는 본안판단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일본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평화안전법제와 관련하여 자위대의 출동 금지를 구하는 소송, 평화적 생존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및 스위스 연방대법원을 소개하였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미국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혈을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한 미국 대법원 판결 Mitchell v. Wisconsin>은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채혈하여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예외적 긴급상황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검사가 긴급상황 또는 합법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수색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흐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프랑스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파리 공항 회사 민영화 법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의 - 프랑스 헌법 제11조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는 최근 프랑스 정부가 파리 공항 회사를 민영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최초로 헌법 제11조의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상황을 소개한 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공항 민영화 입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파리 공항 경영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명시하여 민영화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민투표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 5. 9. 국민투표안이 국민투표 회부를 위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 조직법률 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 프랑스에서는 국민투표 지지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간인 2020. 3.까지 9개월 동안 유권자 1/10 이상이 국민투표 지지등록을 할 경우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